

「2017년 1월 14일 시행」
제23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 명	

문제책형
A

【인문사회계열 : 필수과목】

제 1 과 목	제 2 과 목	제 3 과 목
헌 법	한 국 사	행 정 법

응시자 준수사항

- ☞ 시험문제지를 받으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지 표지에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답안지의 책형란에 문제지의 책형을 기재·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2. 시험시작 전에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되며, 시험이 시작되면 과목 편철 순서, 파손, 인쇄상태, 매 페이지의 동일책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문제풀이를 하기 바랍니다.
- ※ 본 시험문제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21페이지입니다.
-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 4. 문제지(전부 또는 일부)는 가져갈 수 없으며, 시험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헌법 】

1. 다음 중 헌법전문에서 명문화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일 부역자 청산
-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범통
- ③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 ④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 ⑤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의 객관적 법질서성에서 기인한다.
- ② 대법원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한다.
- ③ 사법(私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직접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더불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 ⑤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개념필연적으로 인정된다.

3. 기본권의 경합과 그 해결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기본권의 경합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ㄴ.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다.
- ㄷ.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ㄹ. 기본권주체에게 가능한 한 기본권의 효력이 강화되는 해결책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은 헌법규정에 따라 결성된 조직체이며, 집권정당의 의사는 곧 국가의사를 의미하므로, 정당은 헌법기관이다.
-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직접 공고하여야 하며, 그 정당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 ④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경우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도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인정한다.
- ②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 ③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 ④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 ⑤ 개인의 단순한 취미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경우 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명예권의 주체성은 인정한 바 있다.
- ② 사자(死者)에 대한 사후적 평판이나 명예권 등은 보호될 수 있고, 특히 유족들과의 관계에서 그 보호가 요구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했다.
- ④ 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자의 당구를 칠 자유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된다고 판시했다.
- ⑤ 행복추구권과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관련된 경우에, 개별적 기본권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7. 다음 중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② 비교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④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 설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8. 다음 중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및 다수설에 의함)

- ①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의 선택과 직업교육의 선택 그리고 전직(轉職)의 자유를 의미한다.
- ② 종교의 자유는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 ③ 기본권보유능력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지만, 사자(死者)에게는 인정의 여지가 없다.
- ④ 공법인의 경우에도 학문의 자유와 같이 제한적 범위내에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9.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 ②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0.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교리를 이유로 타 종교를 비판하는 행위도 보호된다.
- ②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는 종교 교육을 할 자유를 제한 받지 않는다.
- ③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의무 거부자는 형사처벌된다.
- ④ 우리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⑤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도 종교의 자유로 보호된다.

11.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의 주체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 ② 음란표현과 저속표현은 헌법적인 보호 영역 안에 있지 않다.
- ③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된다.
- ④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그 모호성·추상성·포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⑤ 광고물은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12.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탄핵사건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도 탄핵소추의 사유이다.
- ④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 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3.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이다.
- ② 공정거래법 범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이다.
- ③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 ④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에는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 ⑤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14.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배상청구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
- ②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 ④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법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15.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인도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교도소의 수용자가 청원하는 경우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합헌이다.
- ③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청원사항이다.
- ④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의원의 소개를 필요적 요건으로 한 것은 청원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다.
- ⑤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6.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17. 대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의제는 대표민주제, 국민대표제, 대의민주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 ② 대의제는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 ③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직접민주제적 제도를 직접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제의 본질이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헌법은 명시적으로 자유위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7조 제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과 헌법 제46조 제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유위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다음 중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②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③ 정당해산과 탄핵심판의 제소
- ④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9.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
- ② 퇴직 후에도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 ③ 재직 중인 경우에는 민사상·행정상으로도 책임을 면제받는다.
- ④ 절도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직 중에도 진행한다.
- 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탄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0.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2순위의 권한대행자이다.
- ② 독자적인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 ③ 집행부에서 독자적인 관장업무가 없으므로 부서권을 가지지 못한다.
- ④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무회의의 의장이다.
- ⑤ 행정각부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행정관청이다.

2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한다.
-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④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수정의결할 수 없다.
- ⑤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22. 다음 중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장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임기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 ②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5일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 ③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과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 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23. 국회의 탄핵소추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 ②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와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4.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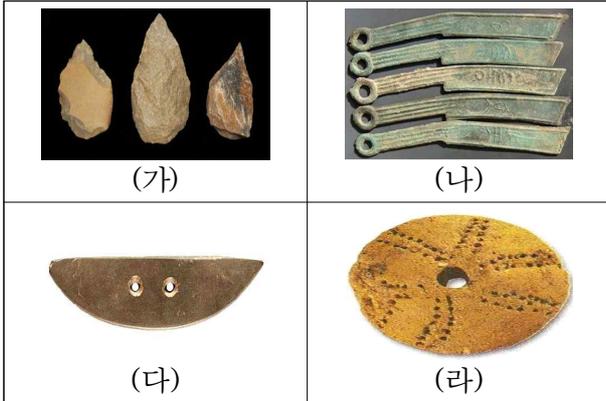
- 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도 허용된다.
- ②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④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25. 대통령 甲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되었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도 이중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대통령의 경우 당선 후 취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 위법 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
- ⑤ 위에서 말하는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 한국사 】

1. 다음은 한반도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처음 사용된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다) - (라) - (나)
- ③ (가) - (라) - (다) - (나)
- ④ (나) - (가) - (라) - (다)
- ⑤ (나) - (가) - (다) - (라)

2. 밑줄 친 ‘이 국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국가는 왕이 없었고, 각 읍락에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씨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 (중략) …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 소, 말로 배상하게 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 ① 각 부족장이 사출도라고 불리는 행정 구역을 다스렸다.
- ② 남자가 일정 기간 처가에 살다 본가로 돌아가는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 ③ 가족이 죽으면 가매장을 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에 넣었다.
- ④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며,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생산되었다.
- ⑤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 구역인 소도가 있었다.

3. 지도의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중앙 정치 조직으로 3성 6부를 수용하여 그대로 운영하였다.
- ② (나) : 왕권 강화로 진골 귀족이 약화되고 6두품이 두각을 나타냈다.
- ③ (가) :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갈을 포함하는 민족 융합 정책을 시행하였다.
- ④ (나) : 9세기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교역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 ⑤ (가), (나) : 두 국가는 사신 파견과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

4.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중국 명대에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실천을 강조하는 (가)이 발달하였고, 청대에는 실증적이며 객관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나)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학문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져 강화학파의 형성, 실학의 발달 등에 영향을 끼쳤다.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성리학 - 양명학 | ② 양명학 - 고증학 | ③ 고증학 - 성리학 | ④ 훈고학 - 성리학 |
| ⑤ 주자학 - 고증학 | | | |

5.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 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 고 하였다. ……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① 후연 등을 격파하여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 ② 천리장성을 축조하여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③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다.
- ④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 ⑤ 율령을 반포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6. (가), (나) 두 사건 사이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왕이 겨우 보현원 문에 들어서고 신하들이 곧 뒤로 물러나려고 할 무렵에 이고 등은 임종식, 이복기, 한뢰 등을 죽이고 무릇 문관·대소 신료·환관 등이 모두 해를 당하였다. - “고려사” -
 (나) 원종 11년 구경(舊京)으로 환도할 기일을 정하여 방시(榜示)하도록 하였다. - “고려사” -

- ① 교정도감이 처음 설치되었다.
- ② 제왕운기가 편찬되었다.
- ③ 만적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④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상정고금 예문이 인쇄되었다.
- ⑤ 지눌이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제창하였다.

7. 다음은 고려의 대외 관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외교적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나) 신기군을 편성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다) 왜구를 격퇴하는 가운데 신흥 무인세력이 성장하였다.
 (라) 일본 원정을 위하여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나) - (가) - (라) - (다)
- ⑤ (다) - (가) - (나) - (라)

8. 밑줄 친 ‘관청’을 설치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이 … 일개 승려에 불과하던 신돈에게 국정을 맡겼다. 신돈은 “오늘날 나라의 법이 무너져 … 이제 관청을 만들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니 … 기한 내 시정하는 자는 그냥 두겠으나, 기한 경과 후에 발각된 자는 처벌할 것이며, 거짓으로 보고한 자도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하층민의 신분 해방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 ② 흥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 ③ 권문세족의 수탈로부터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 ④ 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 ⑤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9. (가)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은/는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기미년 오랑캐를 정벌할 때에는 은밀히 장수를 시켜 동태를 보아 행동하게 하였다. - “인조실록” -

- ①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 ② 4군과 6진이 개척되었다.
- ③ 초계문신제가 실시되었다.
- ④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 ⑤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10. (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관료들에게 관직 복무에 대한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가) 을/를 시행하였다. 15세기 후반 세조 때 토지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자 (나) 로/으로 바꾸어 시행하였다.

— < 보기 > —
 가. (가) : 관리가 죽으면 과전을 자손이 세습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나. (가) : 경기 지방에 한정하여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다. (나) :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르. (나)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11. (가)를 편찬한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한성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로, 해·달·행성의 운행 원리와 위치·시각 등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은 일식과 월식 등 천체 운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경국대전(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② 농사직설(농사직설)이 간행되었다.
 ③ 대동여지도(대동여지도)가 제작되었다.
 ④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⑤ 천상열차분야지도(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천문도가 제작되었다.

12. 다음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인물들의 주장을 가상하여 연설문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묘청 : 개경은 지세가 쇠하였으니 서경으로 천도를 하여 금나라를 정벌해야 합니다!
 ② 최승로 :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治國)의 근원(근원)이옵니다!

③ 만적 : 왕후장상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④ 강감찬 : 거란족(거란족) 당신들은 왜 옛 고구려의 땅에 살고 있소? 우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니 그 땅을 내놓으시오!

⑤ 혜심 : 불교와 유교가 심성 수양이라는 면에서 본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1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몰락 양반의 지휘 하에 영세농,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가산에서 봉기한 이들은 청천강 이북 8군을 점령하였으나 정주성에서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① 명학소(명학소)의 망이가 주도하였다.
 ② 을미사변(을미사변)과 단발령(단발령)이 원인이 되었다.
 ③ 집강소(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폐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④ 평안도(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정책(차별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⑤ 임진왜란(임진왜란)으로 인한 사회 혼란(사회 혼란) 속에서 발생하였다.

14. <보기>의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기 > —
 가. 흥선대원군(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나. 문수산성(문수산성)과 정족산성(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다. 평양 주민들이 관군(관군)과 함께 제너럴 셔먼호(제너럴 셔먼호)를 침몰시켰다.
 르. 독일 상인 오페르트(오페르트)가 남연군(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르 ② 가 - 다 - 나 - 르
 ③ 나 - 다 - 르 - 가 ④ 나 - 르 - 다 - 가
 ⑤ 다 - 나 - 르 - 가

15. 자료와 같이 조선의 정세가 나타난 시기를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최근 영국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암묵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거문도를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할양 받기 위하여 베이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식량을 비롯한 생계 수단의 부족이 심해지면서 소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텐진에 억류되어 있는 대원군, 즉 왕의 아버지의 귀환이 임박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의 이 세력은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도쿄의 내각이 감행한 도박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만 셈입니다. 부산 통신원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 그곳에서 일본인들은 경멸당하고 있으며 형편 없는 난쟁이라는 뜻의 욕설인 “왜놈”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 잘루스키 -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6.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 자료는 (가)의 준비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봉기 참여자들의 이름을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쓰고 봉기의 취지를 알리는 글이다. 가로 48.5cm, 세로 33.5cm의 크기로 20명의 이름이 원형으로 적혀 있다.

- ①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수호하고자 서양을 배격한 사회 운동이다.
 ② 일본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서양의 사상,

제도를 적극 수용하려는 운동이다.

- ③ 중국을 중심으로 열강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서양 세력의 침략을 저지하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었다.
 ⑤ 고부 군수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횡포에 반발해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17. 밑줄 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백 년 전해 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하였으니, 임금이 없으면 신하가 어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나라가 망하면 백성이 어찌 홀로 보존될 수 있겠는가.
 - “면암집” -

- ① 헤이그 특사 파견의 원인이 되었다.
 ②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를 개항시켰다.
 ③ 러·일 전쟁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④ 일진회의 합방 청원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⑤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파견되는 배경이 되었다.

1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시민의 개량주의적 정치 집단으로 변질한 (가)은/는 무산 계급의 투쟁욕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노동자 투쟁과 농민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가)을/를 해소하고 노동자는 노동 조합으로, 농민은 농민 조합으로 돌아가야 한다.
 - “삼천리” -

- ①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②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③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④ 김원봉의 주도로 만주에서 조직되었다.
 ⑤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19.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전개된 민족 운동이 내건 구호로 옳은 것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 가장 급한 일이 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 있고,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아니 된다. …… 우리들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 ① 내 살림 내 것으로!
- ②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 ③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 ④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
- ⑤ 조선인 본위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20. 다음 문서를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①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② “조선 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였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2대 대통령이 되었다.
- ④ 상하이 흥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⑤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하였다.

21. 다음 자료에 나타난 활동을 할 당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 ②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하였다.
- ③ 각 면마다 신사(神社)를 지어 참배하도록 강요하였다.
- ④ 독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 ⑤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어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였다.

22. 다음 내용을 발표한 인물은?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① 김구
- ② 김원봉
- ③ 김규식
- ④ 여운형
- ⑤ 이승만

23. 다음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를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① 7·7 선언
- ② 남북 기본 합의서
- ③ 10·4 남북 공동 선언
- ④ 7·4 남북 공동 성명
- ⑤ 6·15 남북 공동 선언

24. (가), (나) 두 사건 사이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 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쏘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어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 (나) 국민 합의를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 < 보기 > —

- ㄱ.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었다.
 ㄴ.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ㄷ.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ㄹ.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다음 선언의 발표 결과 시행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① 개성 공단 건설
 ② 경의선 철도 복구
 ③ 금강산 육로 관광 시작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⑤ 이산가족 방문과 서신 교환

【 행정법 】

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통령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취소
- 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 ㄷ. 대북송금행위
- ㄹ. 일반사병 이라크 파병결정
- ㅁ. 소위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출생신고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법률 효과를 완결시키는 자기완결적 행위에 해당한다.
- ②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자기완결적 행위인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③ 판례는 건축신고거부(건축신고의 반려 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④ 사인의 공범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납입고지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인지 사법상의 것인지를 불문하고 발생한다.

3.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구 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인 골프장회원모집 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다음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O”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은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적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 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ㄷ.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고 할지라도 무효이다.

- ① ㄱ(O), ㄴ(O), ㄷ(O) ② ㄱ(O), ㄴ(X), ㄷ(O)
 ③ ㄱ(X), ㄴ(O), ㄷ(O) ④ ㄱ(X), ㄴ(O), ㄷ(X)
 ⑤ ㄱ(X), ㄴ(X), ㄷ(X)

5.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지방의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제도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 증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분명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의하여 법률상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⑤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심의위원 선정절차가 위 규정에 엄격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조례는 당연히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담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 ② 부담은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며,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부가할 수도 있다.
 -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철회권의 유보는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여도 행정청에 의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과가 소멸된다.
 - ⑤ 6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그 부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위법한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7. 행정법상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로서 공법행위이든 사법행위이든 가리지 않는다.
 - ② 수정인가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면 그 선임행위는 유효하다.
 - ④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들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없다.
 - ⑤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8.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②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통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한다.
-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 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절차를 결여한 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②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퇴직연금의 환수결정 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10. 다음은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옳은 것만 묶은 것은?

- ㄱ.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ㄴ.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ㄷ.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ㄹ. 검사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ㅁ.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렷한 이상, 실제로는 공무원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장례식장의 사용중지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다.
- ④ 도로교통법상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12.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형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
- ②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 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종이다.
- ②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 ③ 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④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계획의 수립을 청구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다.

14. 판례에 의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 ① 원자력법상의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
- ②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또는 부적정통보
- ③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
- ④ 병역법상의 군의관이 행한 신체등위판정
- ⑤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 조치권고

15. 국가배상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카투사의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를 집행하면서”의 판단기준은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어도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 ③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④ 국가배상법상 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라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을 기속한다.
- ⑤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손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자연력에 의하거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더라도 행정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16.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할 수 있다.
- ②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7.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후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②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감액경정처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다.

④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18.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거부처분이 성립하려면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②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행정 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종전 처분 후 발생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 ④ 거부처분취소에 따르는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소송법에 간접 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 ⑤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19.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당초의 분노 등 관련영업 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없다.
- ②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은 없다.
- ③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④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후 새로 실시된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⑤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20. 지방자치법상 입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⑤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선택적으로 부인할 수 있다.

21. 공무원법관계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명행위는 무효다.
-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 ③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④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인 사직원 제출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⑤ 헌법재판소법상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결정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된다.
- ②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 ④ 국립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더라도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 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을 가지고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는 제한을 받고 있어, 이에 따라 경찰권은 국가사무로만 규정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권 범위는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며, 국가 등의 사무로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기관위임 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제약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 ④ 판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벌칙 규정 특히 과태료 이외의 형벌 등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 ⑤ 조례와 규칙의 형식적 효력에 있어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규범으로 보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으면 그 규칙은 무효이다.

24. 공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적법한 공물의 설치·관리작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물은 반드시 경찰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공물의 안전을 해하거나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 ③ 공물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한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물에 대한 사용이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특별한 권리로 특정인을 위하여 설정하는 경우 즉 도로에 전주를 세우는 것 등은 공물사용권의 특허에 해당한다.
- ⑤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 하천법에 의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규의 공포·시행 전에 관습에 의해 용수를 취득하였음이 뚜렷한 경우라도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25.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옴부즈만(Ombudsman)제도는 북유럽인 스웨덴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특징 중 하나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 등에 의하여 사건화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체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 ③ 고충민원에 관한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과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는 문서 및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수고하셨습니다.